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자치행정

- (한국) 청년정책 기반 조성:
서울 성동구와 전북 완주군
- (독일) 독일의 새해맞이 문화의 변화

지방재정

- (미국) 지역 내 버려진 공간 어떻게 해야 할까?
볼티모어 시의 대응 노력
- (일본) 일본의 지방 e스포츠 대회 개최와
지역 활성화

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

청년정책 기반 조성: 서울 성동구와 전북 완주군

지역 내 청년인구 감소 문제 대두

- 가시화되고 있는 국내 인구감소 및 청년 인구의 지역 간 차이는 지역의 생산성, 나아가 해당 지역의 존폐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
- 이에 따라 지역 내 청년 인구의 유지·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청년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
- 하지만 청년층 지원기반 및 추진체계 미비,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, 청년층 대상의 단순 예산 지원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내 청년사업 지속가능성 및 청년 인구 확보 등의 성과로 연결되기 어려움
- 본 글에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,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

우수 청년정책 사례: 서울 성동구와 전북 완주군¹⁾

- 서울 성동구와 전북 완주군의 청년정책 사례는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타지역 사례와 구별됨
- 즉 해당 사례에서 청년들의 역할은 정책의 수혜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계획, 결정, 전달, 평가 단계에 참여하는 주체로 확장됨
- 청년사회혁신가 및 청년 협동조합 등의 주체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, 의사결정, 서비스 전달 및 운영 관리의 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있음

서울 성동구: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, 좋은 사회 성동구 ‘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’

- 서울 성동구 ‘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’ 정책의 목표는 공공과 청년소셜벤처의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임

1) 행정안전부(2018).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

- 해당 사업에는 지역 NGO, 청년사회혁신가,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성동구와 함께 해당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정책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-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공간 조성(전통시장 내 청년층 창업 지원, 창업·협업 공간 조성 등), 자립기반 조성(교육프로그램 제공, 공모사업을 통한 아이디어 육성 및 발굴,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), 상시적인 협업체계 구축(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민간과의 업무협약) 등임
- 성동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「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였고, 전담조직인 「소셜벤처팀」을 신설하여 행정 지원을 하였음
- 사업의 주요 성과는 지역 청년층의 소통체계(‘성동 청년 소통플랫폼’: 활동가 100여명 활동) 확보, 소셜벤처 창업·협업 공간 7곳 조성, 일자리 창출 및 소셜벤처밸리(성수동 소셜벤처 250여개, 3,000여명의 청년사회혁신가 집적) 형성 등임



| 그림 1 | 서울 성동구 사례 ‘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’

자료: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(행정안전부, 2018)

전북 완주군: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‘청년 완주 JUMP 프로젝트’

- ‘청년 완주 JUMP 프로젝트’의 목표는 지역 내 청년 인구 감소 문제 및 청년 실업 문제 개선임
- 해당 사업에는 마을공동체, 청년사회적기업 및 활동가 등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완주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, 완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청년층이 정책 발굴, 제안 및 실행의 단계에 참여하고 있음
- 완주군은 전담조직인 청년정책팀을 운영하여 청년 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 실태조사(협동조합, 청년 인턴, 완주군이 협업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및 그룹별 포커스 인터뷰 진행)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
- 또한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청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, 청년참

여예산제도 실시하고 있음

- 해당 사례의 주요성과는 청년 참여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및 확대(총128명), 청년 협동조합 및 공동체(113명), 청년인턴 사회적경제분야 지원(15명) 등임



| 그림 2 | 전북 완주군 사례 '청년 완주 JUMP 프로젝트'

자료: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(행정안전부, 2018)

시사점

- 서울 성동구와 전북 완주군의 사례는 지역 청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역 내 기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
-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민-관, 민-민 간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여 상시적인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, 실태조사,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
- 이를 통해 청년 및 청년 단체가 정책의 발굴, 제안, 실행에 참여하기 때문에, 그들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스스로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하고, 능동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
- 해당 청년정책 사업이 우수한 또 다른 이유는 자율협약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제공 및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유한다는 것임
- 또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 편성, 전담 부서의 신설·운영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 지원, 사업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소셜벤처밸리, 협동조합 등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였음
- 이와 같은 지역 청년정책의 성공사례는 새롭게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과 청년 모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
-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, 지역 내 청년 인구의 유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에 대한 관심 역시

커지고 있음

- 하지만 지역 내 인적·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청년정책 추진은 특정 사업에 대한 단기적 예산 소비, 지속성이 결여된 일회성의 전시 행정 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
- 지역 내 청년 인구의 유지 및 유치,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역 내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

이재용
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)